

‘대가성·1회성·추가 연루’ 3대 의혹 주목

경찰, 사립고 시험지 유출 수사... 학부모·행정실장 출금 정년 3년 앞둔 행정실장이 빼돌린 이유 석연치 않아 학교·법인 관계자 연락처 확보... 연루자 휴대전화 통화 조회

‘광주 사립고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광주일보 2018년 7월 13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3일 유출을 요청한 학부모 A(여·51)씨와 시험지를 빼돌린 학교 행정실장 B(57)씨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의사 학부모 A씨와 행정실장 B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부탁했다”고 했고, B씨는 “일부 과목 시험지는 건넸으나 금전거래 등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가성·1회성 유출·내부의 추가 개입 여부 등 핵심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시교육

청도 “이들 3가지 의혹 규명이 감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최근 해당 학교 및 법인 비상연락망, A씨의 아들인 C군의 학교생활기록부 확보한 점 역시 시험지 1회성 유출 및 제3자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 B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일련의 조치라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금품거래가 확인될 경우 B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시험지를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건넸다면 절도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대가 없었다’는 행정실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 상당액까지 포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B씨가 정년을 불과 3년여 남겨두고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밖이다.

경찰은 행정실장의 진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개연성이 큰 금전거래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서는 시험지 유출이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학교 측이 과목별 포장이나 봉인도 없이 행정실장 지배 하에 있던 등 사실 책상 위에 시험지를 수북이 쌓아두는 등 고사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학생들의 제보가 없었으면 묻혀버릴 사안이었다. 경찰은 “금전거래 여부는 물론 이번 사건을 포함해 또다른 시험지 유출 건은 없는지, 이번 사건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 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에 ‘윗선 또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전교조 측은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특유의 역학구도를 알고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특성상 행정실장 독단으로 이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체 9과목 가운데 5과목만 유출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 아들 C군이 나머지 과목 실력은 안정적인데 시험지 유출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학교 안팎에서 나온다.

B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시험지 유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힌 점에 미뤄 1회성 유출이 아니라 윗선 등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경찰은 “단순 변명일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상황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현배 기자 young@kwangju.co.kr

붕괴된 시스템 시험지 유출 사태 불리

시험지 봉인 않고 방치... 시교육청, 일반계고 52곳 실태 점검

붕괴된 시험관리 시스템이 광주 사립고교의 시험지 유출사태를 불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의 내부 통제나 시험관리 시스템이 규정대로만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15일 광주시교육청의 ‘2018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을 보면, 평가담당 부장 및 교사는 시험지 원안의 결재, 인쇄 및 보관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지침대로라면, 시험지는 인쇄실(등사실)에서의 인쇄-평가담당 교사, 평가 원안 및 시험지 인수 후 출제 교사에 인계-출제교사, 문제지 검토 후 포장 및 봉인의 과정을 거쳐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광주 A고 시험지 유출은 인쇄 후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5과목 시험지를 포함해 전체 시험지가 포장은 물론 봉인도 되지 않은 채 등사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 역시 “학사일정, 생활지도 등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험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시험지를 쌓아둔 등사실 관리책임자가 행정실장이어서 범행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도 있지만, 과목별로 정확하게 시험지가 인쇄되고 포장, 봉인됐더라면 범행 의지를 꺾거나 시험지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학교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줬다면 성희롱 아니다”

법원, 건배사 공무원 경고 부당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다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원국 부장판사)는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동장이 했던 건배사를 순천시의 다르게 봤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동장의 건배사를 행

사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바로 잡습니다
지난 11월 구례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45)씨(광주일보 12일자 6면)와 관련, 해당 교사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6개월 가까이 휴직한 사실이 없다고 유족이 알려왔기에 바로 잡습니다.



‘물꽃놀이’ 환호하는 세계 청년들
제4회 세계청년축제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이 ‘DJ와 함께하는 EDM POOL 파티 물꽃놀이’ 프로그램에서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3남매 숨진 광주 화재 ‘엄마 방화’ 결론

광주지법, 진술 번복·반성 없어...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정모(여·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간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아이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실화’ 혐의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정씨의 ‘방화’로 결론짓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탄 신고 비행기 탄다” 광주공항 허위신고 50대에 징역형

○...‘누군가 비행기에 폭탄을 신고 탄다’고 112에 허위신고해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 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는 것.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방 이용객에게 불안,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